

2020. 12. 07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한국경제</b>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68430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684301</a>	
<b>( 요약 ) "韓 은행들, ESG 경영 공시 크게 미흡"</b> - 한국 은행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노력 - 국내 5개 은행의 ESG경영 점수를 공개하면서 목적을 높게 평가했지만 절차, 방침, 인사 분야 등의 성취율은 20% 미만으로 봤다.	
<b><u>"한국의 은행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u></b>	
키이스 리 세계자연기금(WWF)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총괄(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SG 공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NGO)인 WWF는 최근 산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등 <b>국내 5개 은행의 ESG 경영 점수를 공개하면서 ESG 경영의 목적을 높게 평가했지만 절차, 방침, 인사 분야 등의 성취율은 20% 미만으로 봤다.</b>	
리 총괄은 "은행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공시만 놓고 봤을 때 한국 은행들은 어떤 수준의 ESG 경영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재무정보 공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출이나 리스크 관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 12. 07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머니투데이</b>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213324697918">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213324697918</a>	
<b>( 요약 ) SK 이어 포스코도...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가속화</b> - 포스코는 철강산업의 성장둔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성 대두, 수소경제 활성화와 정책추진 등의 수요확대때문 - 포스코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높은 순도로 정제해 운송이나 발전 등 각 수요처에 공급가능성 높아	
SK그룹에 이어 포스코도 수소 공급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수소경제 인프라가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 활용 부문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현재 수소 공급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 진출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최근 그룹 회의에서 수소 생산과 수입처 등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수소 사업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달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친환경 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b><u>포스코가 수소 사업에 관심을 키우는 것은 본업인 철강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로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훈풍을 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u></b>	
포스코는 이미 수소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친 상태다.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 금속분리판 소재로 사용되는 고내식 고전도 스테인리스강 '포스 470FC'를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계열사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 한국퓨얼셀에서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 공급 관련 사업은 미개척 영역이었다. 업계에서는 <b><u>포스코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제철소 공정 중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높은 순도로 정제해 운송이나 발전 등 각 수요처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u></b>	
동종 업계에서 현대제철이 진행 중인 사업모델과 비슷하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인근 수소공장에서 고순도 수소를 만들어 일부를 수소연료전기차 충전용 등으로 외부에 공급한다.	

이밖에 호주 등 해외에서 만든 수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과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SK 그룹이 '생산-유통-공급'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까지 수소 공급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 국내 수소경제 인프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수소산업의 약점이던 저장운송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는 셈"이라며 "현재 한국이 1위인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 활용 부문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12. 0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7\\_0001260516&cid=10401&pid=104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7_0001260516&cid=10401&pid=10400)

## ( 요약 ) “韓 경제 생존 달렸다”...정부, 2050년 ‘탄소 배출량 0’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추진  
- ‘최적가용기법’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과 파생상품 도입등을 통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 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새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탄소 중립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다. 지난 2016 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미국·유럽 연합(EU) 등이 본격화한 점이 그 대표 사례다. EU 는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새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를 고려해서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특히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발전 중심을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낄 부담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춰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하는 '새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재정, 녹색 금융,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뒷받침한다.

우선 스마트 팩토리,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석유화학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경제 구조 전반에서도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고성능 리튬 2차 전지·저전력 반도체화이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고용 안정 등 피해 최소화 정책을 병행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한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녹색 금융이 유입되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 체계 '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 R&D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탄소 중립 R&D를 관리한다.

탄소 중립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위에는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대내외 홍보 등을 맡긴다. 중요성이 커지는 부처의 역할은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중립**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으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비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 10대과제**
-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3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4 도시·국토 저탄소화
  - 5 신(新)유망 산업 육성
  - 6 혁신 생태계저변 구축
  - 7 순환경제 활성화
  - 8 취약 산업·계층 보호
  - 9 지역중심의탄소중립 실현
  - 10 탄소중립 사회에대한 국민인식 제고

**제도기반**

<b>재정</b>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b>녹색금융</b>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b>R&amp;D</b>	탄소중립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b>국제 협력</b>	녹색의제 주도, 주요국과 연대 강화

자료: 정부

20.12.07 안지혜 그래픽 기자 hokma@newsis.com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해 국제 연합(UN)에 제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한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2021년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 수립→2022~2023년 국가 계획 반영' 순서로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 등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 관점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서는 대기 질이 개선되고,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탈탄소를 위한 자원조달을 위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2015년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과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자 참여 허용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제도 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비슷한 성격의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한다.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수입 구조를 발굴하고, 기존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본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 12. 08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 처 )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17119>

## ( 요 약 ) 공유수면 '그린에너지' 파이 커진다

- 2030년까지 육·해상풍력 생산능력을 16.5GW, 해상풍력만 12GW를 설치한다는 목표. 전체대비 73%
- 현재풍력은 대형화 추세, 기술력은 선진 업체와 격차가 있어 기술격차해소가 관건



# 국내에 공유수면(해상수상)을 활용한 '그린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을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등 공유수면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관련 사업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관련 시장 규모는 급팽창할 전망이다.

◇국내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잠재 규모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육·해상풍력 생산 능력을 16.5GW까지 확대한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에만 12GW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전체 풍력 대비 약 73%를 해상풍력으로 채우는 것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전북 서남권(2.4GW)와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이다. 3면 바다가 모두 대상인 셈이다. 해상풍력 개발 초기 서해안에 집중됐던 것과 대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 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해상풍력은 총 9개 762.2MW로, 이 중 90% 이상이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해안 등에 위치했다. 서해안의 경우 낮은 수심 덕분에 해상풍력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를 해상에 띄우는 부유식 기술 발전으로 수심이 깊은 동해안 지역에도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은 332GW로 평가됐다.

수상태양광도 각광받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총 저수면적의 5%인 26.6km<sup>2</sup>만 활용해도 수상태양광 1612MW를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합천호 수상태양광을 필두로 세계 최초 수상태양광 상용화에 성공했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별개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호의 약 30km<sup>2</sup>를 활용, 세계 최대인 21GW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여의도 면적 대비 약 10배로, 약 10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는 약 500만개 이상 태양광 모듈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기업들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시장 확대 전망에 글로벌 기업 진출은 빨라지고 있다. 세계 1위 해상풍력 디벨로퍼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대표적이다. 최근 오스테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에 1.6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13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풍력 발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 2027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오스테드는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공모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기자재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세계 풍력타워 1위 업체인 씨에스윈드는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해 전북도, 군산시와 협의하고 있다(본지 7일자 1면 '풍력타워 세계 1위 씨에스윈드, 첫 국내 공장 세운다 참고) 씨에스윈드는 국내 업체이지만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터키, 영국, 베트남 등 해외에 생산공장을 구축해왔다.

수상태양광 시장에서도 기업 진출은 활발하다. SK E&S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우선협상권을 따낸 200MW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에는 일찌감치 세계 1위 태양광 모듈 업체인 한화큐셀과 국내 신성이엔지 등이 주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 E&S의 경우 내년 초께 태양광 모듈 납품 업체 등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벌써부터 물밑 주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쟁은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2016년 1kWh당 0.19달러에서 2018년 0.13달러까지 내렸다. 오는 2022년에는 현재보다 60%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상태양광 LCOE도 태양광 LCOE 하락에 비례해 내림세다. LCOE 하락은 경제성이 높아진 만큼 보급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제는?

관건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과실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수상태양광은 논외이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인 풍력터빈이 대표적

**현재 풍력 산업 추세는 '대형화'다. 대형 풍력발전기일수록 전력 생산효율이 높은 데다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MW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6MW급 1기를 설치하는 것이 3MW급 2개를 잇는 것보다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을 각각 6% 14% 절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테드만 해도 인천지역에 1.6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설립할 때 국산 풍력터빈 대신 선진 업체 제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력 강화가 시급한 셈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기자재 기술력은 선진 업체들과 비등한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풍력터빈 등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만큼, 향후 얼마나 빠르게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지가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단독] 현대차, 美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한다

- 현대차그룹,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로봇 개발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인수... 인수 가격 8000억~9000억 선
-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서 인수하며... 현대자동차가 가격 절반 부담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로보  
개발 분야 선두주자인 보스턴다이  
내믹스를 조만간 인수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회장  
으로 추대된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다.

8일 투자은행(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소유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끝

내고 조만간 인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서 인수하  
기로 한 가운데 가격은 당초 알려진 1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8000억~900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기량을  
현대자동차가 부담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 개 '스팟'으로 유명한 회사다. 1992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연구소에서 분리 독립한 뒤 2013년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다시 인수됐다. 2015년 처음 선보인 스팟은 네발로 걷고 뛰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능력을 갖추 주목을 받았다.

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낙점한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수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개인항공기(PAV),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8년 그룹 내 로보틱스팀을 신설한 뒤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과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 로보틱스 등에 투자했다. 올초에는 향후 5년간 개인용 비행체, 로보틱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등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IB업계는 현대차그룹이 다른 모빌리티 분야 관련 M&A에도 활발히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20. 12.09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출처 ) 한국경제

[기사링크](#)

( 요약 ) 은행 신용대출, 금융당국 압박에 하나 둘 막힌다

- 정부의 대출규제예고로 인해 '미리 대출을 받아두자'는 가(假)수요 증가...11월 가계대출 잔액 전월대비 2조 증가
- 이에 금융당국 시중은행 압박하여 신용대출 중단 및 대출한도 축소... 정부의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지속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  
라며 시중 은행들을 압박하자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닫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부  
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  
장급)들을 모아 '가계 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회상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측은 지난달 신  
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10월과  
달리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2개 은행을 지목해 강하게 질책하며 '개별 면담'을 요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2개 은행의 행장이나 부행장이 이미 따로 금융당국에 소환됐거나 곧 불러갈 것  
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금감원의 지적대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한 달에만 9조4195억원 증  
가했다. 10월 증가액(7조6611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원  
이 넘는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자 '미리 대출을 받아두자'는 가(假)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은 4조8495  
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4조1354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금융당국이 경고와 압박에 들어가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문을 아예 닫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써왔지만, 대출 수요가 급증하며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남은 수  
단을 모두 동원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당장 이날부터 연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 대출 상담사는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주는데, 지난 수년간 이들을 통한 대  
출을 막은 사례는 없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간편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오는 11일부터 중단한다. 올해 설정  
해둔 대출 한도 3조3000억원이 소진돼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는 설명이지만, 한도를 이유로 주력 상품 판매를 중단하  
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도 조만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인  
데, 은행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시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 수요가 많아 대출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달의 경우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해  
가수요 급증을 자초했다. 은행의 총량 관리 부실을 질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020. 12. 10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한국경제</b>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1793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17931</a>	
<b>( 요약 ) ESS 보조금 내년 폐지에...업계 “사업 접으란 얘기냐”</b> - 내년부터 ESS설치 태양광발전소의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40에서 0으로 하향 - 보조금 수준이 너무 높아 부작용 때문, 대형 공공 ESS를 설치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p>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 주는 보조금 대부분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ESS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과잉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ESS 지원을 늘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p> <p>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b>내년 1월부터 신규 ESS 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40에서 '0'으로 하향 조정</b>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주는 일종의 정책 보조금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p> <p>산업부는 이 가중치를 지난 7월 40으로 낮춘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SS 충전용 전기요금 할인 등 다른 지원도 내년부터 없애거나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관련 산업 충격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일반적인 정부 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치란 평가가 많다.</p> <p>산업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b>“그간 보조금 수준이 너무 높아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마다 ESS를 설치하는 것보다 대형 공공 ESS를 설치해 여러 발전소가 함께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b>며 “개별 ESS 설치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과잉 투자가 벌어지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고 했다.</p> <p>하지만 ESS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ESS REC 관련’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ESS 확대가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p> <p>한 ESS 사업자는 “ESS 수익의 거의 전부는 REC로 발생하는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관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ESS 관련 지원을 늘리고 설치를 장려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p> <p>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전소별 ESS 설치를 줄이는 대신 공공 ESS 설치를 늘릴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에 182억원을 새로 반영했다”며 “업체들의 일감 자체가 갑자기 줄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p>	

2020. 12. 10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b>( 출처 ) 연합뉴스</b> <a href="https://newseinfoamx.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920">https://newseinfoamx.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1920</a>	
<b>( 요약 ) 사모펀드 사태에 증권·은행 민원 확 늘었다</b> - 사모펀드와 대출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이용 과정의 민원이 주로 증가 - 손해회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 등 소비자를 우선 구제할 것	
<p>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안전판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펀드판매사인 금융투자자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6만 8천 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7천 865건) 늘었다.</p> <p><b>사모펀드와 대출거래, 종신·실손보험,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이용 과정의 민원이 주로 증가</b>했다.</p> <p>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보(35.2%), 생보(23.7%), 중소서민(19.4%), 은행(13.4%), 금융투자(8.3%) 순으로 많았다.</p> <p>하지만 지난해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곳은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 업권이다.</p> <p>금융투자 업권의 민원 접수 건수는 총 5천 708건으로 지난해보다 80.5%(2천 546건)이나 급증했다.</p> <p>증권사만 따지면 민원 접수 건수 증가세가 92.5%에 달했다. 사모펀드와 WTI 원유선물 연계상품 판매사 대상으로 민원이 집중됐다.</p> <p>은행권 민원 접수 건수는 총 9천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1천 762건) 많았다.</p> <p>사모펀드 판매사 대상 민원에 신규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 및 금리 산정 등 대출 거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p> <p>손해보험의 민원접수 건수는 총 2만 4천 271건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금융권 내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는 7.0%(1천 589건)에 그쳤다.</p> <p>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과 해지, 면책 결정 등의 민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민원접수 건수는 총 1만 6천 302건으로 7.7%(1천 167건)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p>	

주장하는 보험 모집 유형의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 대부업자와 상호금융, 신용카드, 신용정보, 할부금융사를 포함한 중소서민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1천3천3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01건) 증가했다. 통장압류 해제 요청 등 채권추심 관련 민원, 수분양자들의 신탁 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이 많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사 대상의 펀드 분쟁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거래와 채권추심 관련 민원 제기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금융 애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위: 건, %)

구분	'18년	'19년	'19.1~3분기 (a)	'20.1~3분기 (b)	증감 (b-a)	증감률 (b-a)/a*100
금융민원	83,097	82,209	61,052	68,917	7,865	12.9
(분쟁민원)	(28,118)	(29,622)	(21,629)	(24,482)	(2,853)	(13.2)
은행	9,447	10,148	7,492	9,254	1,762	23.5
중소서민	18,501	16,469	12,581	13,382	801	6.4
카드	6,346	6,085	4,641	4,720	79	1.7
저축은행	1,568	1,215	926	972	46	5.0
대부	4,533	2,841	2,157	2,533	376	17.4
기타	6,054	6,328	4,857	5,157	300	6.2
보험	51,323	51,184	37,817	40,573	2,756	7.3
생보	21,507	20,338	15,135	16,302	1,167	7.7
손보	29,816	30,846	22,682	24,271	1,589	7.0
금융투자	3,826	4,408	3,162	5,708	2,546	80.5
증권회사	2,249	2,749	1,901	3,659	1,758	92.5

\* 증폭·반복 민원 제외

2020. 12.1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투데이

[기사링크](#)

(요약)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전기요금도 건든다

-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금기시해왔던 에너지시장 규제개혁과 전기요금 체계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계통 인프라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 전반에 투자지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계획 등 각종 에너지계획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금기시 하던 에너지시장 규제개혁과 전기요금 체계개선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 가운데 공급, 계통(전력망),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 분야"라며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에너지공급부터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부문에서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설립과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신재생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화력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력계통 부문은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ESS와 같은 백업설비 확충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문에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세제 및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하면서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기어 취급을 하던 시장 규제개혁과 전기료 체계개선도 거론했다.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제도혁신을 위해 에너지시장 규제를 개혁해 민간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료 체계로 전력소비를 한층 효율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내용은 내년 수립 예정인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 담길 전망이다.



성 장관은 "전력, 신재생 관련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착실한 준비로 수급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추진 배경설명을 통해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8.4%이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고 에너지원 구성도 석탄발전이 40.4%"** 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새 패러다임"이라며 "이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0. 12.11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매일경제

### [기사링크](#)

## ( 요약 ) 용적률 400%로 높이고 층수규제 풀면...서울 年5만가구 공급 가능

- 각계 전문가들,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풀어 서울에 연간 5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
- 이주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연평균 최소 5만가구를 꾸준히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힘을 실어준 가운데, 국민 관심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얼마만큼 주택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변 후보자가 주택가격 안정화와 전세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풀어 서울에 연간 5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 국토부 주택 준공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05~2008년 4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연평균 약 4만5000가구였다. 연도별로 보면 5만가구를 넘어선 적도 2번(2005, 2008년)이나 있었다. 이 같은 통계와 **이주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연평균 최소 5만가구를 꾸준히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인식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내년과 후년 공급 물량이 각각 2만8000여 가구, 2만2000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변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더욱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위례마곡고덕강일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서울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땅을 확보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주택을 새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제안하는 첫 번째 공급 확대 방안은 '용적률 상향'이다. 재정비사업 수익성을 올리면서 가구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 상향은 필수적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현행 3층 일반 주거(아파트)를 만드는 용도 지역최대 용적률 300%하에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기존 대비 약 1.3배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4층 일반 주거(용적률 최대 400%)를 신설하고 적용하면 가구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84 공급 대책 당시 서울시는 이 같은 고밀 개발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용적률만 높였다고 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매일경제신문은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를

두 번째로 제안한다. 늘어난 용적률만큼 옆으로 면적을 늘리면 사생활주거 쾌적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최대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인가가 난 성수전락정비구역이 50층이다. 현행 아파트 35층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면, 추가 확보되는 15개층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매경 제언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 일반 주거 4중 신설

"현행 일반 주거 3중(용적률 300%)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가구 수는 1.3배 증가. 일반 주거 4중(용적률 400%) 신설 적용 시 공급 더 늘어"

백준 J&K도시정비 대표

##### 2 층수 규제 완화

"오세훈 전 시장 때 인가 난 성수전락정비구역이 50층. 현행 아파트 35층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면 15개층만큼 주택 공급 증가"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3 도시재생도 공공 재개발

"도시재생지를 공공 재개발하면 공급을 늘린다는 상징적 신호 시장에 줘. 뉴타운 해제 지역도 노후도 요건 완화해 공공 재개발해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4 공공 택지 고밀 개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용지에 각각 1만가구 계획. 지금보다 더 고밀화해 2만가구 이상으로 늘려야"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용적률 규제와 층수 규제만 풀어

#### 줘도 서울 도심 내 아파트 순증 효과

#### 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동안 정

부는 "재건축을 허용해도 재건축

전 아파트 가구 수 대비 15% 정도

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공급 효

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

면 많게는 재건축 전 아파트 가구

수의 두 배가량을 지을 수 있다.

100%의 아파트 순증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이다.

60여 개 구역이 응모에 참여해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 재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세 번째 제언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약 4만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잘만 활용하면 이보다 더 공급 효과를 늘릴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지를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시키면 공급을 늘린다는 상징적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뉴타운 해제 지역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공공 재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지(창신송인), 뉴타운 해제 지역(장위, 성북, 한남 등)도 공공 재개발에 활용하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뉴타운 해제로 인해 서울에 공급되지 않은 가구 수는 약 24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만 공공 재개발로 되살려도 무려 1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내 공급이 제한적인 '공공 택지(정부 소유 땅)'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에 각각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태릉골프장 면적은 약 83만㎡인데 용지면적이 절반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가까이 공급됐다"며 "태릉골프장도 충분히 2만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용산정비창 역시 현재 계획보다 더 고밀로 개발안을 짜서 주택 공급을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